

## 혁신·기업도시 '그대로' 추진

정부 지방발전 보고회 … 한전본사·자회사 등 계획대로 이전

### 무안공항 기업도시와 연계 육성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하고 기업도시 조성을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전남지역 기업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낙후도가 심각한 전남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주 후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

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규모 축소 가능성성이 제기됐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도시 핵심인 한전 본사와 자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이 당초대로 이전하게 됐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확실해 전체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소규모 공

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타 지역 기업도시에 비해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무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자체·정부·시행자가 협의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겸토해온 8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부여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다"고 밝혔고, 최상철 국립발전위원장도 "혁신도시에 변화가 없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못생긴 호박축제'(25~27일)가 열릴 예정인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에서 21일 미리 축제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모양의 호박을 만지며 신기해 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못생긴 호박 선발대회, 호박터널 걷기, 못생긴 호박 이름짓기, 호박마차 타기, 물레방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독도 방어 훈련 이달 말에 실시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이 이달 말과 11월 중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된다.

이상희(李相熹) 국방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나라 당원 유체 의원이 '동방훈련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훈련 시기는 애초부터 5월이 아니라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첫 번째 훈련은 이달 31일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 장관은 "독도 방어 훈련을 계속 실시해 독도 수호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은 2003년부터 유사훈련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연 2회로 실시해되며 청가 규모를 확대했다"며 "독도 방어 훈련은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속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소식통은 "대구기지에 전개된 F-15K 전투기의 임무에는 독도 초계 비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 훈련에는 전투행동반경이 1천 800km에 이르러 독도 근해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최신형 F-15K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대불산단 '전봇대' 모두 해결

정부 예산 128억 반영 … 내년까지 시설 개선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전봇대'와 교량 시설개선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국가산단의 '전봇대' 시설 개선을 위해 7개 교량하중 보강사업비 98억원과 도로

화장 및 개보수 사업비 35억원 등 모두 128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올해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개 교량의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7개 교량에 대한 추가 사업비도 내년 국고에 반영됐다.

'전봇대'도 전남도에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6억원을 들여 대로상의 전선을 지중화했으며 올해도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전선은 연말까지 모두 땅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 선박불로 운송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와 가로등, 종단 전신주 이설사업비에 대해서도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이르면 다음달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부처는 대불산단에 대해 "관리주체인 영암군이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에 인색했었다.

그러나 대불산단 '전봇대'가 지난 1월 대통령령 인수위로부터 기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인 시선이 집중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예산이 배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반영으로 대불산단 내 입주기업들에 실질적인 큰 혜택을 주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를 중심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목포·여수 등 전국 28개 무역항

## 바다 고속도로 생긴다

<블루 하이웨이>

### 정부, 2012년 구축

바다에도 선박이 안전하게 항만으로 입출항 할 수 있는 육지 도로와 같은 차선이 생긴다.

21일 국토해양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선박 수 증가와 대형·고속화, 신항만 건설 등으로 해양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입

항을 위해 목포와 여수 등 전남지역 4개항을 비롯한 전국 28개 무역항에 올해부터 오는 2012년 까지 5년간 1천342억원을 투입해 '바다의 블루 하이웨이(Blue Highway)'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항로 표지를 고속도로 차선처럼 규칙적으로 바다에 설치해 선박이 이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등대와 등부표, 등표 등 항로표지 시설을 대폭 늘리고 선박에서 항로표지를 봤을 때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사업 대상인 무역항은 목포와 인천 등 서해안 8곳,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 7곳, 여수·광양·완도 등 남해안 13곳 등 총 28곳이다.

설치는 일평균 입출항 척수를 기준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항을 분류해 1, 2,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광양·목포·완도는 1순위에 해당한다. 여수는 2순위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 1개 항만에 대해 시범적으로 블루 하이웨이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루평균 50척 이상의 배가 입출항하는 광양·목포·완도·포항항 등 8개 주요 항만에 1단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